

미국 · EU 바이오연료 교역 협력 강화

원료 자트로파 교역기준 완화 협의 ... EU 평지씨 생산농부에게 편향적

미국과 유럽연합(EU)이 11월 초 바이오연료 교역 기준 마련을 위한 양자간 협정 체결을 통해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EU간 신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노력의 첫 산물이 될 협정은 11월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EU-미국 대서양 경제위원회 첫 회의에서 공표될 예정이다.

양자간 바이오연료 협정은 바이오연료 원료인 자트로파 교역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2010년까지 항공연료를 제외하고 전체 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연료의 5.75%를 바이오연료로 충당하며, 2020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미국은 현재 EU의 바이오연료 관련정책이 독일의 평지씨 생산 농부들에게 우호적인 편향적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또 EU 역시 현재 미국이 생산하는 바이오연료 일종인 B99(대두 바이오연료 99%와 미네랄디젤 1%로 구성)에 대해 배럴당 1달러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4월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주도로 성사된 EU-미국 경제위원회는 지적재산권 분야로부터 회계와 금융시장에 이르기까지 양권역간 포괄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과 장애물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C. 보이든 그레이 EU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과 EU의 경제적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상호간 조정을 거쳐야 할 많은 상이점이 존재한다”며 “중국 및 신흥경제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02>